

지방정부 실업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valuation of the Unemployment Policy in Korean Local Governments

- The Case of Kyoung-gi Do -

유길상(한국노동연구원)

임동진(한국노동연구원)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의 실업사태에 대응코자 정부는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정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예산 20.7조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1,360만명이 실업대책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업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5점 척도)는 2.21로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지방정부가 수행중인 실업대책관련 업무 중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 27.4%, 일자리창출 26.4%, 직업훈련 20.1%, 취업알선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인력의 확보 49.5%, 일부사업의 민간위탁 16.4%,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강화 11.4%,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10.4%, 업무 재량권 강화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정부의 실업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서간, 부서내 업무 협조가 원활하고,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실업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지방정부, 지방공무원, 실업정책, 노동시장정책, 정책평가

I. 서론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기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인하여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고, 급기야 IMF 지배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IMF가 요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1998년 1월 15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였다¹⁾. 이와 같은 구조조정과정을 통해 노동시장구조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임시

1) 노사정 합의사항 중 즉시 입법화 된 것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이었다.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급변하였으며 근로자의 취업구조가 매우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급증하여 빈부의 격차도 매우 심화되었다²⁾. 실업자가 급증하고 근로자의 취업구조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제도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실업부조제도가 미약한 상태였다. 더욱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소진 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빈곤선인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계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체계의 미흡은 1997년 이전까지 한국정부가 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GDP의 0.1%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OECD, 1998: 148). 물론 이렇게 공공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한국경제가 압축된 경제성장으로 경제분야 중 비농업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고, 결과적으로 수십 년 동안 거의 완전고용 상태인 실업을 2%를 유지하였으며, 항시 인력부족 현상이 한국노동시장의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이다(임동진, 2001a: 86; 유길상 외, 2000: 1).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심각한 경기후퇴에 의해 실업률이 1998년 6.8%, 1999년 8.4%까지 상승하며 발생한 대량실업은 각종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8년 3월 고용유지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기본구조로 한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 말까지 총 5조 6,672억원(GDP의 1.26%)의 예산을, 1999년에는 총 9조 2,400억원(GDP의 1.87%)의 예산을 집행하였다(정인수 외, 2000). 이는 정부의 실업정책이 단순히 실업자 구제 차원의 의미를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창출하여 실업에 따른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사회연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유완식 외, 2001: 4).

그러나 정부의 실업정책에 평가에 대해서는 정책집행상의 약간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사상초유의 실업문제 해결에 많은 성과와 기여를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실업대책사업의 비효율성, 비효과성으로 인해 '떠주기식 실업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한편에선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자 양산'과 또 다른 한편에선 공공지출을 통한 '실업자 구제'라는 서로 상반되는 실업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의 실업대책 업무를 기획, 집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책추진상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업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 및 빈곤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이 2,287천원(1997년)~2,221천원(1999년)으로 감소하였고, 하위 20%의 평균소득이 947천원(1997년)~784천원(1999년)으로 감소한데 반해, 상위 20% 평균소득은 4,255천원(1997년)~4,591천원(1999년)으로 증가하였으며, GINI 계수는 18.8%(1997년)~34.1%(1999년)로 증가하였고, 빈곤지수는 3.0%(1997년)~6.9%(1999년)으로 증가하여 IMF 이전과 이후에 소득감소와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문형표·유경준, 1999).

II. 정부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1.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면서도 당면한 실업문제 등 제반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각종의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임동진, 2001b: 49).

한국정부 역시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의 실업사태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업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평가 체계의 결여와 미흡 등으로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실업대책 등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평가(evaluation)는 성과측정의 한 영역이며, 이러한 평가는 노동시장정책의 목표와 실행 및 효과를 체계적·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다(Hasan, 1991). 이러한 평가는 198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예산상의 제약과 노동시장정책 추진의 분권화 경향의 이유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Auer and Kruppe, 1996).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대학은 물론 업존 고용연구소(Up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Abt Association 등과 같은 독립적인 연구기관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용역계약을 맺고 프로그램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인력개발부(HRD Canada)에서 각 실업대책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독일은 연방고용청 내의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nstitute for Labour Market and Occupational Research)에서 실업대책사업별 효과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성과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또 다른 이유는 신공공관리주의에 기반을 둔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조류를 무시할 수 없고, 그 효율성은 정부의 신뢰성 및 책임성의 확보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³⁾

정부의 정책집행으로 나타나는 행정성과는 정부의 의도된 활동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충족이나 가치실현에 미친 결과나 영향의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이 성과는 평가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서비스를 공급한 기관이나 수혜자, 또는 제3자의 사후 참여에 의한 판단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가? 즉, 측정방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측정방법에는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이 있는바, 전자는 객관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양적 측면 즉, 주로 서비스의 공급의 효율성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방식이고⁴⁾ 후자는 서비스의 전달이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미친 영향(만족)을 서비스 전달의 최종적

3) 공공부문의 성과평가는 1980년대 이후 OECD를 비롯한 선진국가들의 정부혁신 차원에서 성과측정의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차원에서 성과측정이 활발한 경향을 보여왔다. 예컨대, 영국은 지방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가 199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비용,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4개의 기준에 의해 교육, 사회복지, 폐기물 처리, 경찰, 소방, 쓰레기 수거, 주택 등 19개 분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977년 국제도시관리자 협회(ICMA)가 성과평가안내서를 발간한 이후 지방정부의 성과평가가 정착단계에 있다. 특히 미국의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는 크게 ①내부관리 유형, ②시민주도 유형, ③거버넌스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평가지표에 있어서도 지역여건지표로부터 삶의 질 지표, 그리고 환경, 사회, 경제 등에 관한 다양한 성과지표들을 포괄하고 있다(Ammons, 1995; 박재환, 1999: 159; 박재환·김신, 2000: 54-57).

4) 여기서 효율성은 효과성(effectiveness)과 능률성(eficiency)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Rosen은 성과차원에서 효과성을 집행효과(implementation effectiveness)와 사업효과(program effectiveness)로 구분

성과로 보아, 주민감정에의 차원에서 주민 욕구의 부응정도를 측정하려는 방식이다(박기환, 2001: 65-66)⁵⁾.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주체나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평가의 주체면에서 보면, 외부평가에 대한 사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행정자치부, 1998), 평가내용에서 보면 수요자 측면에서의 성과지표를 이용한 객관적 방법으로 한국능률협회(2001)와 임동진(2000), 중앙일보(1995) 등이 있고, 주관적 방법으로 황명찬·이성복·권경득(1997), 오영석·김상목(199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감과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공급자·생산자 중심의 행정(박천오·김상목·강여진, 2000; 김재홍·조경호, 1995; 박통희, 1996)에서 수요자·고객·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강인호·안영기·김종수·현근, 2001: 45)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평가내용에서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행정 성과에 대한 평가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평가도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의 정책에 대하여 정책의 집행자이며,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인 공무원들의 정책평가는 정책추진상의 여러 문제점의 진단과 정책평가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부의 실업정책 추진실태

1997년말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우리 경제의 위기는 급기야 IMF 구제 금융의 지원체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1998년도에 경제성장률은 역사상 가장 낮은 마이너스 5.8%를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대대적인 고용불안과 급격한 실업의 증가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1998년 3월 26일에 사실상 사상최초로 '종합실업대책6)'을 마련하게 되었다. 단기간에 마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여 실업발생 억제와 실업자 생활안정을 지향하였고, 실시 이후에도 상황변화에 따라 법, 제도 및 사업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 왔다(유완식 외, 2001: 6).

정부에서 추진된 실업대책은 전체 실업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상의 전반적 노력과 함께 기능·연령·학력·생활수준, 과거의 직업 등 실업자의 유형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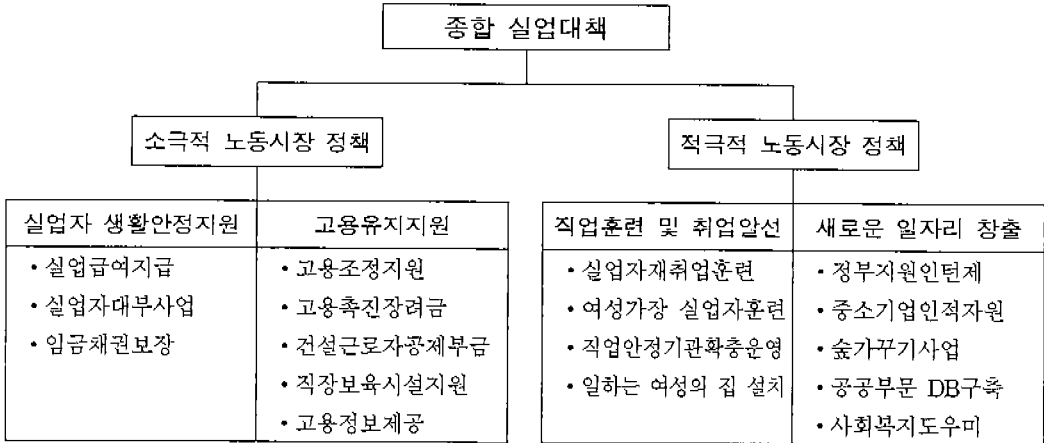
하여, 산출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에 오류가 없을 때 산출의 달성은 바람직한 결과를 저절로 연계되므로 산출의 증가는 바람직한 성취를 의미하며 정책효과라 정의하고 있다(Ellen D. Rosen, 1993: 10).

5) 객관적 측정방법에는 계량화의 용이성으로 보다 객관적이지만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며, 주관적인 측정방법은 설문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의 만족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므로 측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Brudney & England, 1982: 130-132; 오석홍(편), 1993: 626-627, 김시영·김규덕, 1996: 135).

6) 정부의 실업대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1998년 4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 노동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이 위원이 되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의 국장들이 위원이 되는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들 기구는 1998년 11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실업대책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가관이 참여하는 「실업대책실무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추진함으로써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욕과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며,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 하에 수립된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은 크게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⁷⁾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1) 정부의 종합실업대책의 기본 틀



먼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ur market policy)에는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social care)사업,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job keeping)사업이 있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⁸⁾으로는 실직자 취업 및 보호를 위해 취업알선(job placement) 및 직업훈련(job training), 새로운 일자리 창출(job creation)등의 사업이 있었다. 이러한 실업대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골격은 1998년 초기에는 실업자 생활안정 등의 소극적 정책에서 역점을 두었으나, 2000년부터 점차 직업훈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비중이 변화하여 왔다.

정부는 1998년 이후 매년 실업대책⁹⁾을 수립·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보완대책을

7) OECD는 분석적,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을 해줌으로써 실업을 사회적으로 감내할 수 있게 만들거나 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부터 탈퇴하도록 유도해서 실업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의미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로 하여금 노동시장, 취업과 관련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시장의 기능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극적 정책의 예로는 실업급여, 경제활동 축소 등이 있으며, 적극적 정책으로는 직업안정기능 강화, 고용보조금 등이 있다(Martin, 1998). 현재 노동시장정책의 중점을 소득지원이라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재고용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있다(OECD, 1994: 47).

8) 한국보다 앞서 고실업을 경험한 바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실업을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해 왔는데, 1980년대 들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우선 실업감소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소득상실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강철희 외, 2001: 8).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OECD, 1993:39-48; Calmfors, 1994; Layard, Nickell, & Jackman, 1991; Layard, 1997)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9) 지방정부차원의 실업대책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

마련하였다. 정부의 실업대책 집행실적을 내역별로 보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실업자 생활안정지원의 규모가 가장 커서 1998년에는 66.0%, 1999년에는 57.7%, 2000년에는 58.2%를 차지하였다¹⁰⁾. 또한 199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공공근로사업은 1999년과 2000년에 전체 실업대책 예산 집행액의 3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사업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규제개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정보통신 및 관광산업 등 일자리 창출정책 등 본원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1999년의 실업대책 예산은 6,270억원이었으나, 다소 경기회복이 된 2000년의 실업대책 예산은 3,941억원으로 23% 정도 감소하였다. 1999년의 실업대책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예산 중 공공근로사업이 43.1%, 저소득층 생활안정이 35.0%,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17.8%의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2000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크게 축소되었고, 저소득 생활안정사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실업대책은 정치사회적 배경이 상이한 여러 선진국의 실업대책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실업대책의 철학 또는 장기적 지향점이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여 대책간의 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고, 인프라의 미비, 경험부족, 단기간에 수립·시행됨에 따른 준비부족 등으로 일부사업의 경우 목표설정의 부적정하거나 세부사업의 선정, 집행측면에 있어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강순희, 1999: 50). 또한 다수의 실업자, 특히 저소득 실업자의 다수가 이러한 '광범위한' 실업대책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적 안전망이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나 실업대책의 전달과 관련하여 중앙부처간 연계 및 협조의 미비에 따른 정책혼선, 지방정부 참여창구 및 인지부족 등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실업대책마련의 불충분, 그리고 실업대책 재원의 제약 및 불안정성 등도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의 실업대책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을 총괄하고 종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시·군·구 실업대책과는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집행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하였다. 일부 시 단위에 조직되어 있는 고용안정과는 업무별로 직업안정팀, 직업훈련팀, 노사협력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각각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관리, 노동조합 신고·설립 및 집수를 담당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는 복지행정, 복지정책, 생활보호(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의료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자치구에 설치된 실업대책반 또는 공공근로팀은 중앙부처와 시의 실업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자치구 나름의 실업대책사업들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10) 물론 현금급여가 아니라 응자제도인 실직자 대부나 빈곤계층에 대한 보호제도인 생활보호제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수치가 정확히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일 반생활보호 예산을 제외할 경우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규모는 위의 수치보다는 낮아서 1998년이 54.1%, 1999년에 47.4%, 2000년에 38.7%로 나타난다.

〈표-1〉 경기도 실업대책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9년	2000년	증 감
합 계	627,031	394,163	▽232,868
○ 새로운 일자리창출	(12,551)	(9,733)	(▽2,818)
- 벤처창업·육성 종합지원	5,920	3,100	▽2,820
- 외국인 투자유치	3,743	3,673	▽70
- 수출중대 노력	2,758	2,800	42
- 소자본 창업 지원	130	160	30
○ 공공근로사업	(274,600)	(136,000)	(▽138,600)
○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6,537)	(4,847)	(▽1,690)
-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70	73	3
- 경기 9.19 취업광장 운영	31	31	-
- 해외인력 송출	92	150	58
- 고용촉진 훈련	6,344	4,593	▽1,751
○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강화	(112,457)	(43,367)	(▽69,090)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86,800	9,000	▽77,800
- 중소기업 담보부족 해결	15,000	15,000	-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10,657	19,367	8,710
○ 실직자 저소득층 생활안정	(220,673)	(200,018)	(▽20,655)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60,543	56,581	▽3,962
-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2,832	14,892	▽2,060
- 노숙자 보호	715	723	▽8
- 실직자자녀 장학금 지급	100	100	-
-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14,658	12,004	▽2,654
-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	127,945	114,258	▽13,687
- 귀농인 창업지원	1,880	460	▽1,420
- 귀어가 창업지원	2,000	1,000	▽1,000
○ 여성실업대책	(213)	(198)	(▽15)
- 여성 SOHO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123	118	▽5
-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90	80	▽10

자료: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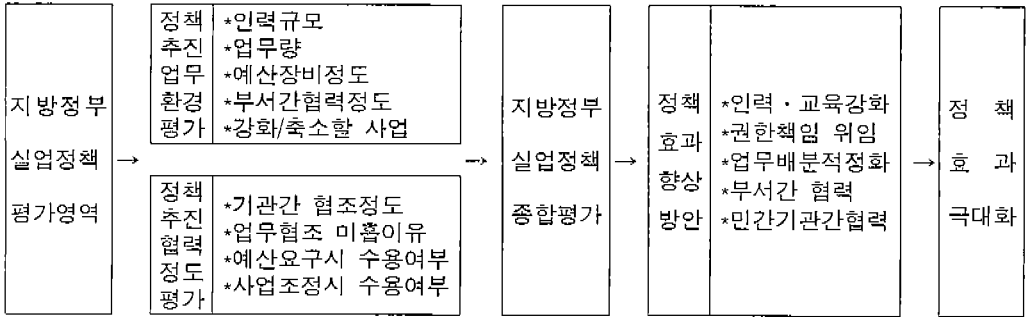
Ⅲ. 분석모형과 조사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지방정부 실업정책 평가를 위해 실업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 물론 정책평가의 주체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정책을 기획·집행·평가하는 공무원들의 평가가 다른 평가주체보다도 업무내용과 정책효과 등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주관적인 또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류의 평가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의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의 평가영역을 크게 정책추진의 업무환경과 정책추진 협력정도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세부평가에 덧붙여 종합적인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지방정부차원에서 실업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업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그림-2〉 실업정책 평가 분석모형



2. 연구방법과 분석기법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연구하기 위해 경기도 도청과 31개 시·군의 실업대책 관련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효과 향상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표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① 인구사회학적 변수, ②정책추진 업무환경 평가 변수, ③정책추진 협력정도 평가 변수, ④지방정부 실업정책의 종합평가 변수, ⑤정책효과 향상방안 변수 등이며,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연구에 사용된 주요내용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과 같다.

〈표-2〉 설문조사표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문항 내용
인구사회학적 변수	① 성별, ② 연령, ③ 교육수준, ④ 소속기관, ⑤ 근무년수, ⑥ 실업대책업무 담당기간
정책추진 업무환경 평가 변수	① 업무별 담당 인력규모,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습득방법, ④ 업무량의 정도, ⑤ 외부간섭정도, ⑥ 예산·장비부족정도, ⑦ 민원인과의 마찰여부, ⑧ 관련부서간 업무협조정도, ⑨ 부서내 협조정도
정책추진 협력정도 평가 변수	① 상급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정도, ② 업무협조 미흡이유, ③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정도, ④ 업무협조 미흡이유, ⑤ 하급기관과의 업무협조정도, ⑥ 업무협조 미흡이유, ⑦ 사업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상급기관 수용여부, ⑧ 사업예산 증액요구시 수용여부, ⑨ 사업내용조정시 수용여부
지방정부 실업정책 종합평가 변수	① 강화해야 할 사업, ② 축소해야 할 사업, ③ 실업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정책효과 향상방안 변수	① 인력충원, ② 교육·훈련강화, ③ 권한·책임위임, ④ 행정적 보고 경감, ⑤ 업무의 세분화, ⑥ 타부서와 업무협조 강화, ⑦ 정무간 정보교환 활성화, ⑧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 ⑨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건

조사응답자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변수의 측정방법으로 ①정책추진 업무환경 평가 변수, ②정책추진 협력정도 평가 변수, ③지방정부 실업정책 종합평가 변수, ④정책효과 향상방안 변수 등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예: '매우 안 됨' 1점 - '보통' 3점 - '매우 잘 됨' 5점 등).

설문조사는 1999년 9월 6일~9월 18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조사요원들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청과 31개 시·군(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실업대책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청의 협조를 얻어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를 배포하여 329부를 회수하였다(설문지회수율 82.25%). 최종 조사분석에 사용한 설문은 319개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x2분석), 행정계층별 인식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ANOVA)분석, 실업정책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정책추진 업무환경 평가변수, 정책효과 향상방안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OLS)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 공무원의 인적특성

조사대상 지방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3>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81.0%, 여성 19.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7.3%, 30대 41.8%, 40대 38.3%, 50대 12.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졸 0.3%, 고졸 52.4%, 전문대졸 16.7%, 대졸 27.1%, 대학원졸 3.5%로 고졸의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속기관(근무지)을 살펴보면, 도청 4.7%, 시청 60.5%, 군청 16.6%, 구청 18.2%로 나타났다.

<표-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항 목	빈 도	비 율(%)	변 수	항 목	빈 도	비 율(%)	
성 별 (n=295)	남 성	239	81.0	근속년수 (n=317)	1년~5년미만	24	7.6	
	여 성	56	19.0		5년~10년미만	87	27.4	
연 령 (n=316)	20 대	23	7.3		10년~15년미만	58	18.3	
	30 대	132	41.8		15년 이상	148	46.7	
	40 대	121	38.3		실업대책 업무기간 (n=316)	3개월미만	26	8.2
	50 대	40	12.7			3~6개월미만	39	12.3
교육정도 (n=317)	중 졸	1	0.3	6~9개월미만		48	15.2	
	고 졸	166	52.4	9~12개월미만		117	37.0	
	전문대졸	53	16.7	1년 이상		86	27.2	
	대 졸	86	27.1	소속기관 (n=319)	도 청	15	4.7	
대학원졸	11	3.5	시 청		193	60.5		
도 청	15	4.7	군 청		53	16.6		
시 청	193	60.5	구 청		58	18.2		

공무원의 근무년수는 1~5년미만 7.6%, 5~10년미만 27.4%, 10~15년미만 18.3%, 15년 이상이 46.7%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실업대책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담당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미만 8.2%, 3~6개월 12.3%, 6~9개월 15.2%, 9~12개월 37.0%, 1년 이상 27.2%로 나타나 1년미만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을 가진 비율이 전체의 82.8%로 상당한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

1. 정책추진 업무환경에 대한 평가

경기도 실업대책관련 업무에 대한 담당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표-4>과 같다. 실업대책관련 업무는 크게 공공근로, 취업알선, 중소기업지원, 창업지원 등 일자리창출, 한시생활보호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기타의 7개로 구분되어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 실업관련 업무 중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업무는 공공근로로 28.4%, 그 다음으로 취업알선 19.3%, 직업훈련 16.9%, 사회복지 16.3%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지원과 창업지원은 각각 9.1%로 타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계층별로 담당 인력규모를 비교해 보면, 도청의 경우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등 일자리창출 순이고, 시·군·구청에서는 공공근로와 취업알선의 순으로 담당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업무별 담당인력 규모

업무 기관	공공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중소기업 지원	창업지원등 일자리창출	한시생보등 사회복지	기 타	합 계
도청	16.0(4)	20.0(5)	16.0(4)	8.0(2)	20.0(5)	12.0(3)	8.0(2)	100.0(25)
시청	27.8(84)	19.2(58)	16.5(50)	9.2(28)	9.2(28)	16.5(50)	1.3(4)	100.0(302)
군청	29.6(24)	19.7(16)	16.0(13)	11.1(9)	9.8(8)	12.3(10)	1.2(1)	100.0(81)
구청	32.6(31)	18.9(18)	18.9(18)	7.3(7)	1.0(1)	20.0(19)	1.0(1)	100.0(95)
계	28.4(143)	19.3(97)	16.9(85)	9.1(46)	9.1(42)	16.3(82)	1.5(8)	100.0(502)

주: 1) 2개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업무에 표시하도록 하였음. 분석결과, 2개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55.9%로 나타났으며, 구청 61.4%, 시청 55.6%, 군청 52.9%, 도청 50.0%의 순으로 나타났음.

실업대책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이 2.66로 나타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는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행정계층별로 구분하여 보면 도청 2.60, 시청 2.65, 군청 2.64, 구청 2.72로 구청, 시청, 군청, 도청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5>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

정도 기관	매우부정 (1점)	부 정 (2점)	보 통 (3점)	금 정 (4점)	매우금정 (5점)	N(%)	Mean(Std.)
도청	0.0	0.0	40.0	60.0	0.0	15(100.0)	2.60(0.51)
시청	0.5	5.2	33.9	50.0	10.4	192(100.0)	2.65(0.76)
군청	0.0	5.7	35.8	47.2	11.3	53(100.0)	2.64(0.76)
구청	0.0	3.4	32.8	51.7	12.1	58(100.0)	2.72(0.72)
계	0.3	4.7	34.3	50.3	10.4	318(100.0)	2.66(0.74)

$\chi^2=4.16, df=12, p=.980$

지방공무원들이 실업대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방법에 대해서는 공문·지침이 93.7%, 동료와 의사소통 4.1%, 업무지시 1.3%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무와 관련

된 필요 지식은 공문·지침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지식·정보 습득방법이 획일적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표-6〉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습득방법

정도 기관	공문·지침	업무지시	동료와 의사소통	교육·연수	기 타	N(%)
도청	93.3	0.0	6.7	0.0	0.0	15(100.0)
시청	93.2	1.6	4.2	0.5	0.5	191(100.0)
군청	94.2	0.0	5.8	0.0	0.0	52(100.0)
구청	94.8	1.7	1.7	1.7	0.0	58(100.0)
계	93.7	1.3	4.1	0.6	0.3	316(100.0)

$$\chi^2=4.69, df=12, p=.967$$

지방공무원들이 실업대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환경을 ①업무량, ②외부간섭여부, ③예산장비 부족정도, ④민원인과의 마찰정도, ⑤관련부서간 업무협조정도, ⑥부서내 업무협조 정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업무량의 정도에서 업무량 과다에 대해서는 전체평균 3.48로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행정계층별로는 도청 4.20, 군청 3.66이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외부간섭여부는 전체평균이 2.57로 외부간섭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예산·장비부족에 대한 항목에서는 전체평균 2.97로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민원인과의 마찰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전체평균 2.92로 나타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반면, 군청과 시청은 각각 3.02, 2.99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민원인과의 마찰이 다른 행정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업무관련 부서간 업무협조와 부서내 업무협조 정도는 모두 보통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공무원의 업무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예산·장비가 부족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이 심하다고 나타났다.

〈표-7〉 업무환경에 대한 평가

기관별	내용	업무량 과다 정도			외부간섭 정도			예산·장비 부족 정도		
		N	Mean	Std.	N	Mean	Std.	N	Mean	Std.
도청		15	4.20	0.68	15	2.93	0.80	15	2.93	1.22
시청		187	3.42	0.77	185	2.59	0.81	183	2.92	0.92
군청		53	3.66	0.78	53	2.68	0.80	53	3.32	0.70
구청		56	3.30	0.91	56	2.29	0.78	57	2.79	0.90
계		311	3.48	0.81	309	2.57	0.81	308	2.97	0.91
기관별	내용	민원인 마찰여부			관련부서간 미흡 정도			부서내 협조 미흡 정도		
		N	Mean	Std.	N	Mean	Std.	N	Mean	Std.
도청		15	2.47	0.92	15	2.93	1.03	15	2.27	1.03
시청		183	2.99	0.99	182	2.63	0.86	182	2.22	0.78
군청		53	3.02	1.20	53	2.68	0.85	53	2.43	0.69
구청		57	2.70	1.00	57	2.54	0.80	56	2.34	0.79
계		308	2.92	1.03	307	2.64	0.86	306	2.28	0.78

2. 정책추진 협력정도 평가

실업대책업무와 관련된 상급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 2.96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청 2.33, 시청 3.02, 군청 2.94, 구청 2.95로 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도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청에 비해 광역 지자체인 도청이 중앙정부와 업무협조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8〉 상급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의 정도

기관 \ 정도	매우부정 (1점)	부정 (2점)	보통 (3점)	긍정 (4점)	매우긍정 (5점)	N(%)	Mean(Std.)
도청	6.7	20.0	26.7	26.7	20.0	15(100.0)	2.33(1.23)
시청	0.0	2.2	22.7	46.5	28.6	185(100.0)	3.02(0.78)
군청	1.9	3.8	19.2	48.1	26.9	52(100.0)	2.94(0.89)
구청	0.0	3.6	23.6	47.3	25.5	55(100.0)	2.95(0.80)
계	0.7	3.6	22.5	45.9	27.4	307(100.0)	2.94(0.84)

$\chi^2=25.70, df=12, p=.012$

상급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협조체계가 미흡 38.1%, 업무 분장기준 모호 19.0%, 과도한 업무량이 각각 19.0%, 상대기관의 실무자의 무성의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청은 협조체계 미흡, 시청은 과도한 업무량, 군·구청은 협조체계 미흡이 가장 상급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상급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협조체계가 미흡하고 업무분장 기준 모호, 과도한 업무량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표-9〉 상급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 이유

기관 \ 정도	상대기관 실무자무성의	업무분장 기준모호	책임소재 불분명	협조체계 미흡	과도한 업무량	N(%)
도청	0.0	25.0	0.0	75.0	0.0	4(100.0)
시청	18.2	18.2	18.2	18.2	27.3	11(100.0)
군청	0.0	0.0	0.0	66.7	33.3	3(100.0)
구청	33.3	33.3	0.0	33.3	0.0	3(100.0)
계	14.3	19.0	9.5	38.1	19.0	21(100.0)

$\chi^2=9.9, df=12, p=.620$

실업대책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¹¹⁾과에 업무협조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 2.38로 원할치 못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청 1.75, 시청 2.51, 군청

11) 실업대책사업의 유관기관은 공공근로사업은 민간실업대책기구, 취업알선사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직업소개소 등, 직업훈련분야는 지방노동사무소, 민간 또는 공공 직업훈련기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지방중소기업청 사무소와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은 창업보육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2.21. 구청 2.17로 시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도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청에 비해 광역 지자체인 도청이 실업대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10〉 유관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의 정도

정도 기관	매우부정 (1점)	부 정 (2점)	보 통 (3점)	긍 정 (4점)	매우긍정 (5점)	N(%)	Mean(Std.)
도청	0.0	37.5	50.0	12.5	0.0	8(100.0)	1.75(0.71)
시청	0.7	8.7	38.7	43.3	8.7	150(100.0)	2.51(0.80)
군청	5.1	12.8	43.6	33.3	5.1	39(100.0)	2.21(0.92)
구청	6.9	20.7	34.5	24.1	13.8	29(100.0)	2.17(1.14)
계	2.2	11.9	39.4	38.1	8.4	226(100.0)	2.38(0.88)

$\chi^2=20.73, df=12, p=.051$

유관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협조체계가 미흡 48.1%, 상대기관 실무자의 무성의 22.2%, 과도한 업무량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 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청은 협조체계 미흡, 시청은 상대기관 실무자의 무성의, 군청은 과도한 업무량, 구청은 기관간 협조체계 미흡이 가장 업무협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행정계층별로 업무협조미흡의 이유가 차이를 나타났다. 유관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업무협조체계가 미흡, 상대기관 실무자의 무성의, 과도한 업무량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표-11〉 유관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이유

정도 기관	상대기관 실무자무성의	업무분장 기준모호	기 관 간 실적경쟁	협조체계 미 흡	과 도 한 업 무 량	기타	N(%)
도청	0.0	0.0	0.0	100.0	0.0	0.0	3(100.0)
시청	36.4	9.1	0.0	36.4	18.2	0.0	9(100.0)
군청	14.3	0.0	0.0	28.6	28.6	28.6	7(100.0)
구청	16.7	0.0	16.7	66.7	0.0	0.0	6(100.0)
계	22.2	3.7	3.7	48.1	14.8	7.4	27(100.0)

$\chi^2=11.81, df=6, p=.066$

실업대책업무와 관련된 하급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 3.02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청 3.07, 시청 3.06, 군청 3.00, 구청 2.87으로 도청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구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12〉 하급 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의 정도

정도 기관	매우부정 (1점)	부 정 (2점)	보 통 (3점)	긍 정 (4점)	매우긍정 (5점)	N(%)	Mean(Std.)
도청	0.0	0.0	13.3	66.7	20.0	15(100.0)	3.07(0.59)
시청	0.0	1.1	21.8	46.6	30.5	174(100.0)	3.06(0.75)
군청	0.0	4.2	16.7	54.2	25.0	48(100.0)	3.00(0.77)
구청	0.0	0.0	36.5	40.4	23.1	52(100.0)	2.87(0.77)
계	0.0	1.4	23.2	47.8	27.7	289(100.0)	3.02(0.75)

$\chi^2=12.83, df=9, p=.170$

실업대책관련 사업제안·제도개선을 상급기관에 건의했을 때 상급기관의 수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 2.17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청 1.82, 시청 2.19, 군청 2.27, 구청 2.08로 실업대책 관련 사업제안에 상급기관의 수용이 가장 어려운 기관으로는 도청으로 나타났고, 사업제안 수용이 잘되는 기관은 군청으로 나타났다.

〈표-13〉 사업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상급기관 수용여부

정도 기관별	매우부정 (1점)	부정 (2점)	보통 (3점)	긍정 (4점)	매우긍정 (5점)	N(%)	Mean(Std.)
도청	18.2	18.2	36.4	18.2	9.1	11(100.0)	1.82(1.25)
시청	4.1	18.0	37.2	36.0	4.7	172(100.0)	2.19(0.93)
군청	4.1	10.2	42.9	40.8	2.0	49(100.0)	2.27(0.84)
구청	11.5	11.5	40.4	30.8	5.8	52(100.0)	2.08(1.06)
계	6.0	15.5	38.7	35.2	4.6	284(100.0)	2.17(0.95)

$\chi^2=12.31, df=12, p=.421$

실업대책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 요구를 건의했을 때, 상급기관의 수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 2.25로 부정적인 나타났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청 2.00, 시청 2.23, 군청 2.33, 구청 2.31로 나타났으며, 실업대책 관련 예산증액 요구시 상급기관의 수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관으로는 도청으로 나타났고, 수용이 잘 되는 기관은 군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제안에 대한 상급기관의 수용여부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14〉 사업예산 증액요구시 상급기관 수용여부

정도 기관별	매우부정 (1점)	부정 (2점)	보통 (3점)	긍정 (4점)	매우긍정 (5점)	N(%)	Mean(Std.)
도청	10.0	20.0	50.0	0.0	20.0	10(100.0)	2.00(1.25)
시청	4.7	18.1	32.7	38.6	5.8	171(100.0)	2.23(0.97)
군청	2.0	12.2	36.7	49.0	0.0	49(100.0)	2.33(0.77)
구청	13.5	7.7	25.0	42.3	11.5	52(100.0)	2.31(1.20)
계	6.0	15.2	32.6	39.7	6.4	282(100.0)	2.25(0.99)

$\chi^2=25.70, df=12, p=.012$

실업대책관련 사업내용 조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했을 때, 상급기관의 수용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 2.03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청 1.91로 가장 수용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구청 1.96, 군청 2.04, 시청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제안, 예산증액, 사업조정 등에 대한 상급기관 수용여부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면,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와 관계는 대체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역 지자체인 도청과 중앙정부 부서와는 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사업내용 조정에 대한 상급기관 수용여부

정도 기관별	매우부정 (1점)	부정 (2점)	보통 (3점)	긍정 (4점)	매우긍정 (5점)	N(%)	Mean(Std.)
도청	18.2	9.1	45.5	18.2	9.1	11(100.0)	1.91(1.22)
시청	5.9	17.6	44.1	30.0	2.4	170(100.0)	2.05(0.90)
군청	6.1	18.4	40.8	34.7	0.0	49(100.0)	2.04(0.89)
구청	11.5	19.2	32.7	34.6	1.9	52(100.0)	1.96(1.05)
계	7.4	17.7	41.5	31.2	2.1	281(100.0)	2.03(0.94)

$$\chi^2=10.04, df=12, p=.612$$

3. 지방정부 실업정책의 종합평가

현재 지방정부가 수행중인 실업대책관련 업무 중 강화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설문결과, 중소기업지원 27.4%, 일자리창출 26.4%, 직업훈련 20.1%, 취업알선 17.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기타 사업에 대한 비중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행정계층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도청의 경우는 취업알선과 일자리창출, 시청은 중소기업지원, 군·구청은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공근로사업 등의 단기적, 소모적 또는 시혜적인 대책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알선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사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강화해야 할 실업대책 사업

사업 기관	공공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중소기업 지 원	일자리 창 출	생활보호	기타	N(%)
도청	0.0	33.3	26.7	6.7	33.3	0.0	0.0	15(100.0)
시청	2.6	16.3	17.9	31.1	26.3	5.8	0.0	190(100.0)
군청	3.8	7.7	19.2	26.9	28.8	9.6	3.8	52(100.0)
구청	3.5	24.6	26.3	21.1	22.8	1.8	0.0	57(100.0)
계	2.9	17.2	20.1	27.4	26.4	5.4	0.6	314(100.0)

$$\chi^2=28.34, df=18, p=.057$$

현재 지방정부가 수행중인 실업대책관련 업무 중 축소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설문결과, 생활보호 33.2%, 취업알선 17.6%, 공공근로 14.5%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청은 생활보호, 직업훈련, 군청은 중소기업지원, 생활보호, 구청은 생활보호, 취업알선 등으로 나타나 행정계층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공공근로사업은 비효율적이고, 민원마찰로 인한 어려움과 사업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생활보호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객관성의 확보문제와 단순히 부조적, 시혜적인 성격의 사업으로는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알선사업은 현재 각 지방정부마다 설치된 취업정보센터가 전문인력의 부족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조직자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하였다.

〈표-17〉 축소해야 할 실업대책 사업

사업 기관	공공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	중소기업 지 원	일자리 창 출	생활보호	기타	N(%)
도청	0.0	7.7	30.8	15.4	0.0	46.2	0.0	13(100.0)
시청	14.2	18.1	15.5	4.5	10.3	35.5	1.9	155(100.0)
군청	30.2	20.9	11.6	18.6	2.3	16.3	0.0	43(100.0)
구청	4.4	15.6	17.8	8.9	15.6	37.8	0.0	45(100.0)
계	14.5	17.6	16.0	8.2	9.4	33.2	1.2	256(100.0)

$\chi^2=37.34, df=18, p=.005$

지방공무원들이 실업대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21로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청 2.27, 시청 2.24, 군청 2.35, 구청 1.95로 나타났으며,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군청이 높게, 구청은 낮게 나타났다.

〈표-18〉 실업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정도 기관	매우부정 (1점)	부 정 (2점)	보 통 (3점)	긍 정 (4점)	매우긍정 (5점)	N(%)	Mean(Std.)
도청	0.0	0.0	73.3	26.7	0.0	15(100.0)	2.27(0.46)
시청	3.6	11.9	42.5	40.4	1.6	193(100.0)	2.24(0.82)
군청	0.0	15.4	40.4	38.5	5.8	52(100.0)	2.35(0.81)
구청	5.3	22.8	45.6	24.6	1.8	57(100.0)	1.95(0.87)
계	3.2	13.9	44.2	36.6	2.2	317(100.0)	2.21(0.82)

$\chi^2=19.45, df=12, p=.078$

실업대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근로 2.36, 취업알선 2.20, 직업훈련 2.12, 중소기업지원 2.17, 일자리 창출 2.19, 생활보호 2.09, 기타 2.25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결과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활보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19〉 실업정책의 분야별 평가

정도 업무별	매우부정 (1점)	부 정 (2점)	보 통 (3점)	긍 정 (4점)	매우긍정 (5점)	N(%)	Mean(Std.)
공공근로	1.4	10.2	42.2	43.5	2.7	147(100.0)	2.36(0.76)
취업알선	2.0	15.3	45.9	33.7	3.1	98(100.0)	2.20(0.82)
직업훈련	3.4	16.9	44.9	33.7	1.1	89(100.0)	2.12(0.82)
중소기업지원	6.5	13.0	39.1	39.1	2.2	46(100.0)	2.17(0.93)
일자리창출	2.4	16.7	42.9	35.7	2.4	42(100.0)	2.19(0.83)
생활보호	4.7	16.5	43.5	35.3	0.0	85(100.0)	2.09(0.84)
기 타	0.0	25.0	25.0	50.0	0.0	8(100.0)	2.25(0.89)

$\chi^2=19.45, df=12, p=.078$

4. 실업정책 효과 향상방안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①인력충원 필요, ②교육훈련강화, ③권한책임위임, ④행정적 보고 경감, ⑤업무의 세분화, ⑥민원인과의 의사소통, ⑦타부서와 업무협조 강화, ⑧정부간 정보교환 활성화, ⑨민간기관과의 협력강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업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력충원 필요 3.58, 교육훈련강화 3.48, 권한책임위임 3.42, 행정적 보고 경감 3.90, 업무세분화 3.35, 민원인과의 의사소통 3.75,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강화 3.65, 정부간 정보교환 활성화 3.78, 민간기관과의 협력강화 3.65로 각각 나타났다. 실업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적 보고 경감, 정부간 정보교환 활성화, 민원인과의 의사소통, 타부서와 업무협조 강화,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행정적 보고 등의 redtape이 업무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원인과의 민원마찰 감소, 민간기관, 정부간, 타부서간의 협조와 협력 강화가 실업정책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책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인력충원의 필요는 도청, 교육·훈련 강화는 도청, 권한·책임 위임은 구청, 행정적 보고 경감은 도청, 업무의 세분화는 군청,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은 군청,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강화는 도청, 정부간 정보교환은 도청, 민간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군청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정계층별로 실업정책 효과 향상방안도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표-20〉 실업정책 효과 향상방안

기관별	내용	인력충원 필요			교육훈련 강화			권한책임 위임		
		N	Mean	Std.	N	Mean	Std.	N	Mean	Std.
	도청	15	4.20	0.68	15	3.80	0.41	15	3.53	0.74
	시청	190	3.57	0.87	188	3.46	0.77	187	3.44	0.76
	군청	51	3.47	1.01	51	3.47	0.86	51	3.35	0.72
	구청	58	3.55	0.92	58	3.48	0.86	58	3.40	0.84
	계	314	3.58	0.90	312	3.48	0.79	311	3.42	0.77
기관별	내용	행정적 보고 경감			업무의 세분화			민원인과의 의사소통		
		N	Mean	Std.	N	Mean	Std.	N	Mean	Std.
	도청	15	4.20	0.41	15	3.40	0.74	15	3.73	0.59
	시청	189	3.90	0.78	188	3.40	0.88	187	3.71	0.73
	군청	51	3.84	0.83	51	3.43	0.94	51	3.88	0.71
	구청	58	3.90	0.85	58	3.09	0.86	57	3.79	0.75
	계	313	3.90	0.79	312	3.35	0.89	310	3.75	0.72
기관별	내용	타부서와 업무협조 강화			정부간 정보교환 활성화			민간기관과 협력강화		
		N	Mean	Std.	N	Mean	Std.	N	Mean	Std.
	도청	15	3.80	0.77	15	4.13	0.52	15	3.80	0.86
	시청	188	3.62	0.71	190	3.75	0.64	188	3.60	0.71
	군청	51	3.78	0.76	51	3.86	0.60	51	3.86	0.69
	구청	57	3.61	0.82	58	3.69	0.78	56	3.61	1.07
	계	311	3.65	0.74	314	3.78	0.66	310	3.65	0.80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

49.5%, 일부사업의 민간위탁 16.4%,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 강화 11.4%,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10.4%, 업무재량권 강화 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문인력확보를 제외한 조건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청은 기관간 업무조정 강화가 중요하고, 시청과 군청과 구청은 일부사업 민간위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실업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의 확보라고 응답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유능한 외부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공직임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21〉 실업정책 효과 향상을 위한 필요 조건

정도 기관	유관기관간 업무조정강화	업무재량권 강화	전문인력 확보	예산편성 자율성확보	일부사업 민간위탁	기타	N(%)
도청	26.7	20.2	40.0	0.0	13.3	0.0	15(100.0)
시청	10.9	11.5	51.6	9.4	13.5	3.1	192(100.0)
군청	7.7	9.6	51.9	13.5	15.4	1.9	52(100.0)
구청	12.1	3.4	43.1	13.8	27.6	0.0	58(100.0)
계	11.4	10.1	49.5	10.4	16.4	2.2	317(100.0)

$\chi^2=19.83, df=15, p=.179$

5. 지방정부 실업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지방정부 실업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①인구사회학적 변수, ②정책추진 업무환경 평가 변수, ③정책효과 향상방안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방정부 실업정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수 중 정책추진 업무환경 평가 변수, 정책효과 향상방안 변수는 여러 복합변수로 구성되어 있어 각 복합변수간의 내적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reliability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이들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91로 매우 높은 편이며, 따라서 어떤 항목을 제외시켜도 신뢰도 계수를 낮아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책추진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측정하는 변수는 ①부서간 업무협조 미흡(V21), ②부서내 업무협조 미흡(V22), ③외부간섭 과다(V23), ④민원인과의 마찰(V24), ⑤예산부족(V25), ⑥업무량 과다(V26) 등의 6개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정책효과 향상방안을 측정하는 변수로 ①정부간 정보교환 활발 필요(V31), ②민관협력 강화(V32), ③타부서의 업무협조 필요(V33), ④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V34), ⑤인력보충(V35), ⑥업무의 세분화(V36), ⑦행정적 보고업무 경감(V37), ⑧권한책임 부여(V38), ⑨교육훈련 강화(V39) 등의 9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들의 판별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추진 업무환경 평가 변수 6개와 정책효과 향상방안 변수 9개의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22〉과 같다. 정책추진 업무환경 변수를 살펴보면, 요인 1이 전체변량의 약 38.17%, 요인 2는 전체변량의 18.475% 각각 설명하여 2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의 약 56.64%를 설명하고 있다.

〈표-22〉 복합변수의 요인분석 결과(Varimax Rotation)

정책추진 업무환경 평가 변수(TV2)				정책효과 향상 방안 변수(TV3)			
변수명	Factor Loading		Community	변수명	Factor Loading		Community
	요인1(CV1)	요인2(CV2)			요인1(CV3)	요인2(CV4)	
V21	.837	-	.706	V31	.769	-	.606
V22	.773	-	.610	V32	.757	-	.586
V23	.623	-	.503	V33	.709	-	.546
V24	-	.844	.395	V34	.621	-	.436
V25	-	.618	.454	V35	-	.767	.593
V26	-	.515	.731	V36	-	.720	.560
				V37	-	.627	.430
				V38	-	.501	.324
				V39	-	.453	.279
진채변량에 대한 백분율	38.17	18.47			34.62	13.79	
누적백분율	38.17	56.64			34.62	48.41	

주) 요인부하값이 .4이하는 -로 표시하였음

정책추진 업무환경 평가 변수 V21, V22, V23의 각 변수를 한 개의 요인으로 하여 관련부서간 업무협조변수(CV1)라 명명하였으며, 변수 V24, V25, V26의 각 변수를 업무여건변수(CV2)라 명명하였다. 또한 정책효과 향상방안 변수 V31, V32, V33, V34의 각 변수를 한 개의 요인으로 하여 유관기관간 협력변수(CV3)라 명명하였으며, 변수 V35, V36, V37, V38, V39의 각 변수를 업무능력향상변수(CV4)라 명명하였다.

따라서 이들 측정항목들은 모두 복합하여 하나의 복합변수를 구성하였다. 지방정부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개의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의 값을 모두 합한 후 항목수로 나눈 평균값을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로 각각 사용하였다.

〈표-23〉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를 지방정부 실업정책의 평가에 대하여 회귀하였을 때, 9개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변량의 약 27.4%를 설명하고 있다. 9개의 독립변수 중 업무협조변수(CV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여러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실업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변수로 나타났다. 즉, 실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간 업무협조가 잘되면,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업무협조의 정도(CV1)을 구성하는 하위변수가 ①부서간 업무협조 미흡(V21), ②부서내 업무협조미흡(V22), ③외부간섭과다(V23)이기 때문에 부서간, 부서내 업무 협조가 원활히 되고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실업정책이 잘 추진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지방정부 실업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OLS)

독립변수	종속변수					
	B	Beta	t	Sig		
관련무서간 업무협조변수(CV1)	.133	.160	2.597	.010		
업무여건변수(CV2)	5.909E-02	.072	1.137	.257		
유관기관과의 협력변수(CV3)	-1.374E-02	-.017	-.277	.782		
업무능력향상변수(CV4)	-9.205E-02	-.115	-1.781	.076		
성별(0=남, 1=여)	.245	.118	1.863	.064		
연령	3.423E-02	.034	.358	.721		
학력	-5.673E-02	-.067	-1.036	.301		
소속기관(1=도청,2=시청,3=구청, 4=군청)	-4.845E-02	-.049	-.774	.439		
재직기간	-1.107E-02	-.014	-.143	.887		
상수(Constant)	2.408		4.620	.000		
R ² / Durbin-Watson	.274 / 2.074					
ANOVA		SS	df	MS	F	Sig
	Regression	13.882	11	1.262	1.992	.030
	Residual	163.470	258	.634		
	Total	177.352	269			

V. 결론

지방정부 실업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실업대책관련 업무 중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된 업무는 공공근로로 28.4%, 그 다음으로 취업알선 19.3%, 직업훈련 16.9%, 사회복지 16.3%의 순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지원과 창업지원은 각각 9.1%로 타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들이 실업대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방법에 대하여는 공문·지침이 93.7%, 동료와 의사소통 4.1%, 업무지시 1.3%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무와 관련된 필요 지식은 공문·지침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에 대한 지식·정보 습득방법이 획일적이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실업대책업무와 관련된 상급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평균 2.96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청 2.33, 시청 3.02, 군청 2.94, 구청 2.95로 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도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청에 비해 광역 지자체인 도청이 중앙정부와 업무협조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상급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협조체계가 미흡 38.1%, 업무 분장기준 모호 19.0%, 과도한 업무량이 각각 19.0%, 상대기관의 실무자의 무성의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지방정부가 수행중인 실업대책관련 업무 중 강화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지원 27.4%, 일자리창출 26.4%, 직업훈련 20.1%, 취업알선 17.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기타 사업에 대한 비중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21로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도청 2.27, 시청 2.24, 군청 2.35, 구청 1.95로 나타났으며,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군청이 높게, 구청은 낮게 나타났다. 분야별 실업대책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근로 2.36, 취업알선 2.20, 직업훈련 2.12, 중소기업지원, 2.17, 일자리 창출 2.19, 생활보호 2.09, 기타 2.25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은 높게, 생활보호사업은 낮게 나타났다.

넷째, 실업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에 대한 조사결과, 전문인력의 확보 49.5%, 일부사업의 민간위탁 16.4%,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강화 11.4%,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10.4%, 업무 재량권 강화 10.1%의 순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교육과 유능한 외부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공직 임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실업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련부서간의 업무협조의 정도로 나타났다. 즉, 부서간, 부서내 업무 협조가 원활하고,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실업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 강순희. (1999),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8(2).
- 강인호·안형기·김종수·현근. (2001),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45-61.
- 강철희·김교성·김영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실업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 Vol. 45: 7-39.
- 경기도. (1999), 「경기도 지역특성화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용역보고서.
- 김시영·김규덕. (1996),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모형의 소고", 「지방자치연구」, 8(3).
- 김재홍·조경호. (1995),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평가: 울산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4(2): 133-154.
- 문형표·유경준. (1999), 「주요경제지표」, 노동부
- 박기관. (2001), "지방정부의 행정성과평가 및 적용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 박재완. (1999),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개발: 논점과 예시", 「한국지방재정논집」, 4(1).
- 박재완·김신. (2000),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지방행정연구」, 14(2).
- 박천호·김상묵·강여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내적 상황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간의 관련성: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4). 51-74.
- 박통희. (1996),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의 고객지향적 혁신과 문제점", 「지방행정연구」, 11(40): 93-121.
- 유길상 외. (2000),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유완식 외. (2001), 「98~2000년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임동진. (2000), 「도시정부의 생산성 평가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박사논문.
- 임동진. (2001a), "지방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 임동진. (2001b), "지방재정효율화를 위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성 측정과 준거집단 분석", 「지방정부연구」, 5(1). 49-70.
- 정인수 외. (2000), 「99년 실업대책의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능률협회. (2001), 「한국의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 행정자치부. (1998), 「지방자치단체 평가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 황명찬·이성복·권경득. (1997),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4).
- Ammons, David N. (1995),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onitoring in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ICMA).
- Auer Peter and Thomas Kruppe. (1996), "Monitoring of Labour Market Policy in EU Member State", in Gunther Schmid et al.,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Labour Market Policy and Evalu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 Brudney, Jeffrey L. & England, Robert E. (1982). "Urban Policy Making and Subjective Service evaluation: Are They Compatibl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s*, 42(2)
- Calmfors, L. (1994), "Active Labou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Crucial Design Features." *OECD Economic Studies*, No. 22, Spring.
- Hansan, Abrar. (1991), "Evaluation of Employment, Training and Social Programmers: An Overview of Issues in OECD," *Evaluating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5.
- Layard, R., (1997), "Sweden's Road Back to Full Employment ", *Economic & Industrial Democracy*, Vol.18, London: Sage.
- Layard, R., Nickell, S., Jackman, R., (1991), *Unemployment: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Labour Marke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in. John P. (1998), "What Works among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Evidence Form OECD Countries' Experience",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5.
- OECD. (1993), *OECD Employment Outlook*, Paris: OECD.
- OECD. (1994), *OECD: Job Study: Facts, analysis, strategies*, OECD: Paris.
- OECD. (1998), "Key Employment Policy Challengers Faced by OECD Countries",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5

柳吉相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Univ. of Hawaii 경제학 석·박사(1988년,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Human Capital on the Personal Distribution of Male Earnings in Korea).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부원장급)으로 재직 중. 주요 관심분야는 고용보험, 노동정책, 사회정책, 주요저서로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2000), 「노동시장정책 재원조달방식의 국제비교」(2000),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Korea」(2000), 주요논문으로, 「외국인의 고용 및 관리효율화 방안」(2000), 주요논문으로 "Financial Crisis and Foreign Workers in Korea,"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1998), "고용증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고용보험을 중심으로"(1996) 등 다수 발표, 행정고시 23회, 경제기획원 사무관(1980-89), 현재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이사, 한국사회보장학회이사, 노동부 노동개혁평가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Tel: 02-785-1804, E-mail: ksyu@kli.re.kr.

林東鎮 : 건국대학교 행정학 박사(2000년, 도시정부의 생산성 평가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재직 중,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노동·복지정책, 주요논문으로는 "차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2001), "지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성 측정과 준거집단 분석"(200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측정과 정책평가"(2000) 등을 발표.

Tel: 02-3775-0674, E-mail ncdjlim@kli.re.kr.